

“하야” vs “신중”…野 잠룡들 정국해법 제각각

문재인 ‘거국중립내각’…안철수·박원순 “하야”

안희정·김부겸 “2선 후퇴”…이재명 “탄핵 필요”

최순실 게이트 파동으로 인한 정국 해법을 두고 야권 잠룡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최순실 파동으로 인한 권력 지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대선 구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정국해법이 서로 다른 셈이다. 우선 야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몸조심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하야나 탄핵에는 거리를 두고 거국중립내각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2선 퇴진이 조건이다. 문 전 대표는 9일 시민사회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총리의 권한과 관련, “내지와 외

치를 구분할 수가 없다”며 “내각의 권한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인사권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사퇴만이 정국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분노한 민심과 함께하며 정세 상태에 있는 지지를 상충을 노리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장,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의 사퇴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사국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12일 촛불 집회에

함께 참석하기로도 했다. 가장 강경한 측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최순실 사태 직후부터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던 지지율이 상승한 이 시장은 최근에서는 국회 차원의 탄핵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계복귀 직후,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거국중립내각 총리직 수용에 긍정적 답변으로 논란이 일면서 스탠스가 꼬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과도정부론’을 내세우고 있다. 손 전 대표는 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총리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을 이어받아 7공화국 준비하는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원칙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 신분

인데다 중도층 견인을 위해서라도 너무 강경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 부담스러운 행보를 풀이된다. 안 지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의 강연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정수행 능력을 상실한 박 대통령이 이 상황을 수습하려면, 모든 걸 내려놓고 국회와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가 지역구인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남 민심이 은근히 신경 쓰이는 눈치다.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상 2선 후퇴와 거국내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조각에 대한 총리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대통령의 공개적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당장 중단을”

“최순실 정국 틈타 속전속결” 野 땀비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일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9일 서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를 했다. 지난 1일 도쿄에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한 지 8일 만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협정문 작성을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부터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SCM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암박성 메시지’를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국방부가 ‘최순실 파문’으로 어수선한 틈 타 협정 체결 밀어붙이려한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된 상태여서 민감한 안보 현안에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4년 전 국민의 강한 반대로 무산한데다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군사정보는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바치는 것”이라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이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방부가 국정혼란을 틈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국방부는 당장 군사정보협정 실무 협의를 중단하고, 거국내각 구성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면 박근혜는 대통령 아닌 일본의 간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내년 4월 조기대선 치르고 대통령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죄의식 없는 확산법”이라고 말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여야 지도부 환담 참석자에서 제외하려 했다고 당사자인 노 원내대표가 9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달 24일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때 5부 요인·여야 지도부와 환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김재원 당시 청와대 정부수석의 정세균 국회의장 측에 연락해 ‘정의당은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실은 “대통령은 국회에 손님으로 오는 것”이라며 “정의당의 참석을 막을 권한은 없다”고 김 전 정부수석 측에 전했고, 정의당도 박 대통령과의 환담에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실제로 회담에 자리를 함께 했다. 노 원내대표는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할 대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탄핵 모두 정답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 있다가도 여론이 조금이라도 우호적으로 돌아온다 싶으면 언제든 권한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다”며 “현재 보수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상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 하야하면 바로 구속된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퇴임 이후에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보장을 해줄 필요도 있다”라며 “따라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맞물려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까지 한시적인 ‘퇴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 현안 및 당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지붕 두가족’ 새누리…비박·친박 각각 세결집 시도

새누리당 내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수습 방향을 놓고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의 균열이 갈수록 커지면서 ‘한지붕 두가족’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모임’(진정모)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열어 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모임에는 회원은 아니지만 5선의 정병국, 4선 김재경·나경원 의원 등 3선 이상급 중진의원들까지 가세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당 소속의 시도지사, 그리고 원외 의원장까지 외연을

확장해 오는 13일 ‘비상사국 회의’를 하기로 했다.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건강한 보수를 만들고, 당 해체 후 재창당이 필요하며 여기에 당 지도부 문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비박계 강석호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현 지도부가 계속 버틴다면 건강한 보수의 의견을 담아내는 또 다른 새누리당 내의 지도부제나 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친박계도 물밑에서 세력 결집을 시도하며 서서히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조만간 재선 그

룹을 중심으로 모임을 결성할 예정”이라면서 “비박계를 제외하면 25명 정도이고, 여기에 초선까지 합치면 50~60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전격 결정하자 이에 항의하며 긴급 회동을 열었던 바로 그 재선 그룹이 중심이다. 이와 별개로 국회 본청에서는 초선의원 모임도 열렸다. 16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주로 자리를 지켰다.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요구는 없었으며, 당이 분열돼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진석 “도대체 野 통일된 주장 뭐가”

문재인·추미애·안철수 겨냥 “거국내각 주장 중구난방”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관련한 야당 지도부 및 대선주자들의 주장에 대해 시국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도저히 종잡을 수 없다. 난감하고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으로 야당 지도부 및 대선주자들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및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의 거국중립내각 주장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야당의 통일된 주장이 무엇이나”며 이갈이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문 전 대표가 이날 ‘내각의 권한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 전반을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것은 명백한 위헌으로, 대통령에게 하야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안은 행정부를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원수의 기능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위헌이자 하야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야당에 간곡히 요청하건대 불쑥불쑥 이야기를 내놓지 말고 책임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정위기 타개를 위한 하나의 답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혹여 오는 12일 장외집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중구난방식 제안을 던지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국정파탄을 노려, 헌법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다. 우리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은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계속 조건을 다는 걸 보니 거국내각에 참여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책임의식이 있다면 총리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이 한미관계에 신경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나오는 만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매몰돼 있을 게 아니라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외교 안보분야에 대응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내일의 행복노후 오늘의 국민연금이 만듭니다

“예전의 할머니, 네 덕분에 요즘 내가 너무 행복하다
하루 벌어들여 하루 쓰면서 아들 공부시키라, 결혼시키라 힘들었을 텐데
어찌 그 어렵고 시골에 국민연금 넣을 생각을 했니?
네가 정말 대견하다~ 고맙다, 할머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천윤순 씨의 실제 사연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추후 납부 확대

회사를 퇴직한 주부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가능 (2016년 12월 시행 예정)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40%~60%를 국가에서 지원

실업크레딧 제도

구직 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2016년 8월 시행)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평생연금 국민연금 공금할 댄 1355